



강원도정 소식

강원행복추진단 250명 선정

고성지역 7명 ... 7개 분과위원회 운영

강원도는 도민과 원활한 소통강화를 위해 인터넷 접수와 시군 추천을 접수받아 총 250명의 '강원행복추진단' 위원을 선정 발표했다.

강원행복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 지역경제, 농축수산, 건설방재, 도정전반 등 7개 분과위원회와 18명의 시군 대표를 선출해 운영한다.

강원행복추진단 위원은 도정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실시, 도정시책 홍보 및 도정 주요 시책 추진상의 문제점 등 도민의견 수렴 전달,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 설문조사 응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펼친 위원에게 마일리지 부여와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활동 우수자는 '이달의 우수활동자'로 선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광호 기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최우수

고성군, 강원도 평가 군단위 최우수 ... 체납액 7억800만원 감소

고성군이 2011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도내 평가에서 군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6일 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시상상을 받았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는 시군간의 세수형평을 감안해 시지역과 군지역을 구분해 이뤄졌으며, 2010년도 지방세 현년도·과년도 징수실적과 2011년도 과년도 체

납액 징수실적을 합산해 평가했다.

고성군은 2010년 결산 이월 체납액이 20억8백만원으로 2009년도 체납액 27억1천6백만원 대비 7억8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징수분야에 대한 각종 지표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또한 체납액 징수 집중근무 시간제 운영, 일자리사업 참가자를 활용한 소액체납자 납부 독려, 체

차량 번호관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개발해 자주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접경지역 지원정책 마련 촉구

강원희망포럼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 전략' 정책토론회

고성군 등 강원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역 주둔 군부대와의 민군협력 활성화와 자연과 역사문화 등이 연계된 개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원희망포럼(상임대표 심재엽, 공동대표 정문헌·박세환·김기선)은 지난달 29일 올림픽 기념 춘천 국민생활관에서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종연구소 최중대 박사의 '접경지역 자원과 민군협력 활성화',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박사의 '접경지역 공동발전 방안', 강원대 경영대 이승구 교수의 '접경지역 관광레저문화 활성화 방안' 등 3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희망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정문헌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탁경명 강원방송 고문과 강원희망포럼 박세환(전 국회의원)·정문헌(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 당협위원장) 공동대표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문헌 공동대표는 "고성군 등

도내 접경지역을 희망이 넘치는 고품격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각 분야별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알림

본지 박승근 취재기자 사회복지협 사무국장으로

본지 취재기자로 활동하던 박승근 기자(39세, 사진)가 10월 1일자로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신임 박승근 사무국장은 현내면 출신으로 경동대 사회복지경영학과를 졸업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고성군청년회 사무국장과 음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 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박 국장은 앞으로 고성신문 거진·현내지역 시민기자로 본지와 인연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고성신문

하도급 계약 고질적 부패 사전 차단

국민권익위, 심사때 해당업체 근무경험자 심사위원 배제 권고

앞으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과 하도급을 받게 되는 사람의 시공능력을 심사하는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에는 해당업체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나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

지 않으면 위원에서 해촉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최근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심사 때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장치를 마련하고,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들을 해촉하는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안

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위원이 심사 업무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또는 직위를 이용해 알선 등 부패를 저지르면 형법을 적용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률을 개정하기로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

와 협의했다.

권익위가 이러한 권고를 하게 된 것은 공직자가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고 무면허 등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을 선정하거나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위반한 자가 계약을 묵인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패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의 공사 담당 감독관들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공정·투명하게 심사해야 하나, 일괄하도급·무자격 하도급업체 선정 등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15억원 상당의 뇌물

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농협 계열사인 NH개발은 뇌물을 받고 무면허·저가 하도급업체 선정하는 등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공사 감독과 농협 관계자에게는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상납하는 등 부패 행위가 적발돼 관련자가 구속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선되면 하도급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제고돼 하도급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